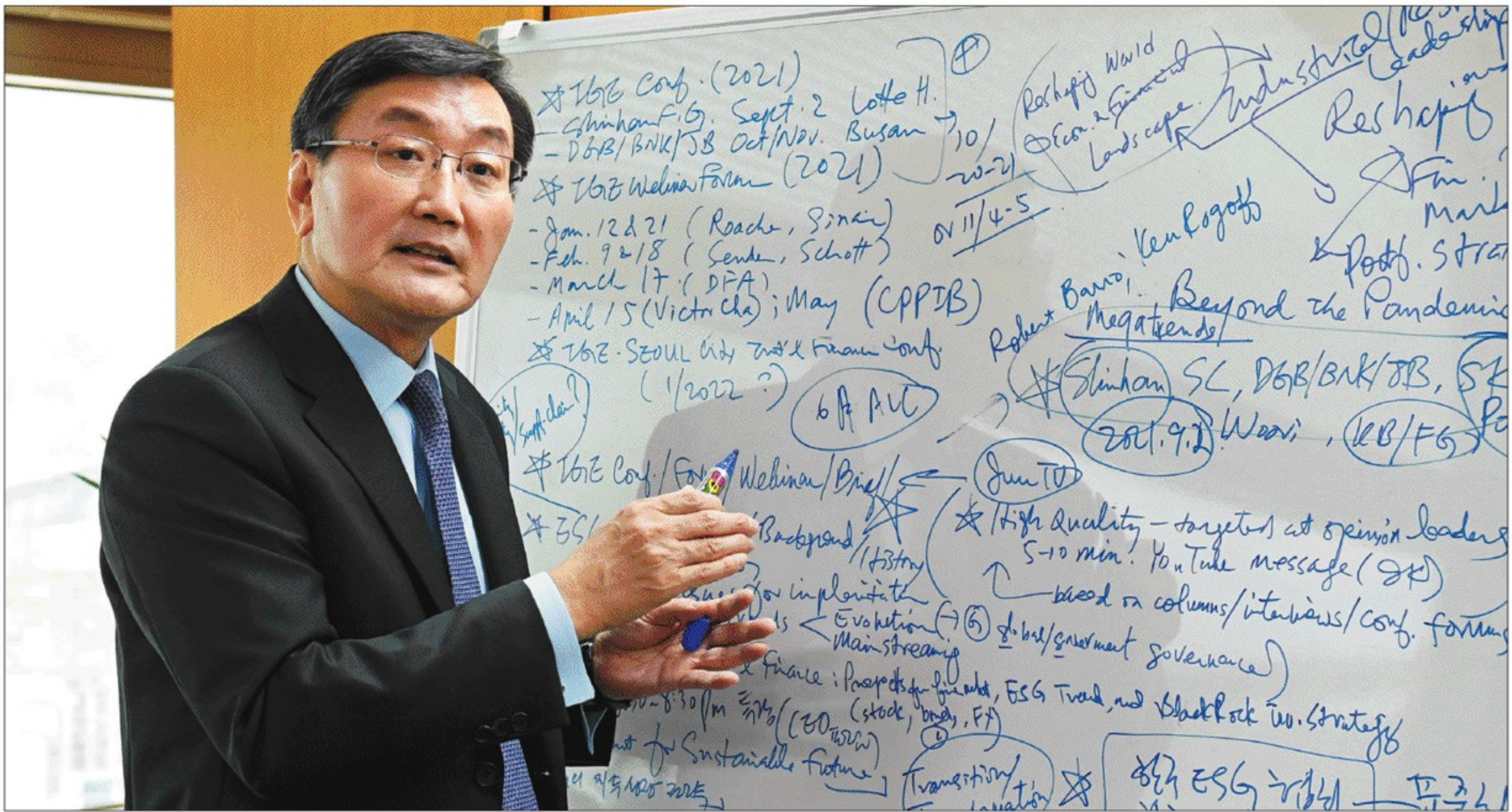


Culture & Life

파워인터뷰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공직활동 이후에도 국제세미나에 활발하게 참석하며 다양한 경제 현안에 발을 담고 있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 있는 세계경제연구원에서는 그는 정부의 재정집행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실물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무실의 화이트보드에는 그가 참석하는 포럼 일정과 주제, 기조발표 내용 핵심 단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김낙중 기자

“경기부양 돈 풀면서, 기업엔 규제3법… 액셀·브레이크 같이 밟는 꼴”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인터뷰=박정민 경제부 차장

■ 주가와 수출 지표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게만 들리진 않는다. 근래 이런 호황을 겪어본 적이 없지 만 사람들은 이 같은 ‘호황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 어느 순간 불거질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 미국·중국 간 갈등 고조 등 연일 국내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 영향을 줄 사안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이번 호황이 그리 길지 않을 것 이란 불안감이 엄습한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정부의 씬섬이는 오히려 그 규모를 점점 키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조만간 새로운 대통령을 준비하는 시기에 접어들다.

코로나19나 미·중 간의 극한 대립은 분명 전대미문의 영역이다. 과거 위기를 극복한 경험에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도 얻고자 찾은 인물이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 이사장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겪은 인물이다. 그 역시 지금의 상황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며 “현 정부가 임기 말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분야뿐 아니라

경제·외교안보 그리고 방역까지 연계된 고차방정식을 지금 정부의 행태로는 더 이상 풀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는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이 위기 극복의 답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미·중을 사이에 둔 ‘줄타기’ 외교는 그 수명을 다했다고 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20·30세대의 속내, 연금고갈 문제 등 그가 가진 폭넓은 시각을 지난 13일 그의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을 방문해 공유했다.

—재정문제 얘기를 먼저 꺼내겠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 재정 지출이 급증하며 나랏빚이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부채(광의)는 1985조3000억 원까지, 국가채무(D1)는 846조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큰 폭의 재정적자 발생은 전 세계적인 일반적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양호한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경제 지표를 해석할 때 절대치인 수준과 규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추세와 속도다. 정부는 우리 수준 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부채비율 증가 속도를 보면 매우 걱정스럽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총생

돈풀기 효과 키울 정책은 없고 기업만 옥죄니 엔진 터질 지경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

2026년 부채비율 69.7% 전망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 경제 최후보로 재정건전성 흔들

2030세대는 ‘동학개미’ 주축 株主로서 친기업·친시장 선호 정부, 경제정책 기조 고민해야

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7~28%였다. 지금(2020년 기준 44.0%)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훨씬 큰 재정 쿠션이 있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 때도 지적됐던 것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해도 2026년 부채비율이 69.7%까지 올라가는 등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늘어나는 상당 부분이 복지 분야 지출이라는 점이다. 이는 쉽게 줄이기 어렵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지금 40%라든지, 앞으로 4~5년 내 60% 범위 안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그런 속도로 늘어난다면 감당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서 지출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려 확충하는 것이 아니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으니 이를 포함해서 관리해야 하는 게 맞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학적 수준의 돈 풀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나랏빚 상황이 양호한 수준이 아니라면 과연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나.

“물론 위기 상황을 맞으면 초기 대응에서는 과감한 재정, 통화, 금융정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기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돈을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키거나 부양한다는 노력이 재정지출 승수효과를 높이려면 결맞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가 위기 과정인데도 기업을 옥죄는 ‘기업규제 3법’을 도입했다. 브레이크를 누른 채로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셈이다. 어떻게 되겠나. 엔진이 터지

거나 고장 난다. 기본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 돈을 푸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적절한 곳에 돈이 제대로 돌아가게 기업이 풀린 돈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맞춰줘야 했다. 아울러 재정 수요가 있어서 돈을 쓴다고 해도 효과가 큰 부분에 우선 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절감해야 했다.”

—전에 부채 감축이 최고의 ‘백신’이라고 평가한 적도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비(非)기축 통화국이다. 미국 같은 기축 통화국도 과도한 재정적자 부담은 향후 금리 인상 등의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기축 통화국이라 감내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 같은 비기축 통화국 입장에서는 부채가 늘어난다면 결국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형태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감내하려면 가장 큰 힘은 재정이다. 건전해야 한다. 비기축 통화국에서는 재정 건전성이야말로 국가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세율 확대 로 세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진정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다.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도는 결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14면에 계속

전 이사장은…

■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국제금융·경제 전문가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데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경영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계은행(WB) 수석연구위원, 한미경제학회 사무총장, 국제금융센터 소장, 외교통상부 국제금융대사를 거쳐 주요국 경제·정치 글로벌 석학·리더들과 폭넓게 교류, 수십 년에 걸쳐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를 쌓았다.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한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이 전 이사장에게 자신이 설립한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직을 맡아 달라고 수년

동안 요청한 끝에 지난 2019년 세계경제연구원원에 합류했다. 전 이사장이 국내에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 출신으로 초대 금융위원장에 파격 발탁되면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맹활약한 전 이사장은 금융위원장에

서 물러난 지 1년도 채 안 된 2009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기용됐고, 기금운용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로로 연임됐다. 금융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기 전 이미 1997년 외환위기 극복 프로그램 마련에 참여했고, 이규성·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한재·진부 부총리의 특별보좌관으로 외환

·금융정책 수립에 관여하기도 했다. ‘위기를 넘어’를 포함해 다수의 국·영문 저서와 논문이 있다. ‘아시아지역 올해의 CEO상’ (2011년), ‘청조근정훈장’ (2012년), ‘인디애나대학을 빛낸 국제동문상’ (2013년)을 받았다.

■ 1949년 서울 출생 ■ 서울사대부속고, 서울대 경제학과 ▲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 ▲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 ▲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 ▲ 국제금융센터 소장 ▲ 우리금융 부회장 ▲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세계은행·외교부 거친 국제금융·경제 전문가… 초대 금융위원장 맡기도